

강진군, ‘병영천댐’ 신규 조성…물 부족·홍수 잡는다

정부 건설계획 선정 국비 965억원 확보
저수용량 120만t·홍수 조절 57만t 규모
생활·농업·하천 유지 용수 등 상시 확보
강진원 군수 “지속가능 발전 기반 마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이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집중호우 등 물 관련 재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 대규모 병영천댐 건설을 추진한다.

31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신규편 건설계획에 병영천댐 건설사업이 포함돼 사업비 965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군이 2023년부터 가뭄과 홍수 피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자원의 물관리 시설 필요성을 정부와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 협의한 결과물이다. 새롭게 건설되는 병영천댐은 기존 흙골저수지 제방 아래에 댐을 축조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총사업비 965억원 전액 국비로 투입되며 총 저수 용량 120만t, 홍수 조절 용량 57만t의 매머드급 위용을 갖추게 된다.

댐이 완공되면 강진지역에 안정적인 생활·농업 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하천 유지 용수를 상시 확보하게 된다.

특히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나 태풍 발생 시 댐의 선제 홍수 조절 기능을 통해 하천 주변 지역의 고질적인 침수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향후 인구 구조 변화와 지역 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물 수요 급증에 유연하게 대처



강진원 강진군수가 지난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함께 병영천댐 건설 예정 부지를 방문해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강진군 제공>

하는 것은 물론, 군민에게 사계절 맑은 물을 공급할 전망이다.

군은 댐 건설 후보지 선정에 만족하지 않고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전남

광주특별시 등 유관 기관과 전방위 행정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나아가 댐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가 군 전역으로 고루 확산되도록 주변 지역 종합 발전 방안과 주민 상생 지원 대책을 관계 기관과 적극 조율할 방침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병영천댐 건설사업 선정은 지역 백년대계를 깊이 고민하며 정부에 사업 타당성을 지속 건의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물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지속적인 지역 발전을 이끄는 가장 핵심적인 자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는 “병영천댐을 통해 가뭄과 홍수 걱정 없는 안전한 강진을 만들겠다”며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탄탄한 미래 발전 기반을 다지는 데 모든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진=박길중 기자

나주시, 벼 출수기 병해충 적기 방제 당부

잦은 비 이삭도열병·벼멸구 등 확산

현장 예찰 강화…피해 최소화 총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는 31일 “잦은 강우와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벼 출수기 주요 병해충 발생 우려가 커져 농가의 예찰과 적기 방제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벼 출수기 전후는 한 해 농사의 수확량과 품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다. 최근 다습한 기후가 지속돼 이삭도열병, 세균벼알마름병, 깨씨무늬병, 이삭누룩병 등 주요 병해와 벼멸구 등 해충 확산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삭도열병과 세균벼알마름병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발생 빈도가 급증해 틈틈이 포장을 살펴 선제 방제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벼멸구의 경우 벼 포기 아랫부분을 살피고 방제 시 약액이 밑동까지 충분히 도달하도록 살포해야 한다.

농약 살포 시에는 기상예보를 미리 확인해 비가 내리기 직전엔 피하고,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시기를 활용해 방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또한 반드시 해당 병해충에 등록된 정식 약제를 사용하고 수확 전 안전 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이 한 농가의 벼 깨씨무늬병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나주시 제공>

시는 읍·면·동 및 농업인단체와 연계해 벼 재배지역 현장 예찰을 강화하고 마을방송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방제 정보를 농가에 제공할 방침이다.

형남열 나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출수기 이후 잦은 비로 병해충 발생 위험이 큰 만큼 논을 자주 살펴 초기 증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제 적기를 놓쳐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목포대 의대 유치 실패는 ‘전략·원팀’ 부재 탓

≡취재수첩≡



정해선 지역특집부 국장

되면서 물거품이 됐다.

발표 후 목포 지역사회에서는 “예견된 결과였다”는 자조와 함께 지역 정치권과 행정, 대학의 준비부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무엇보다 핵심 문제는 전략의 부재와 원팀의 부재다. 순천과 목포의 대응 방식은 극명하게 대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순천은 국회의원과 시장, 시의회, 시민사회가 의대 유치를 지역 최우선 현안으로 규정하고 한 목소리를 냈다. 시민들의 삼보일배까지 이어지면서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반면, 목포는 기자회견과 현수막, 보도자료 중심의 홍보전에 머물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태관 목포문화재단 대표는 “36년간 공들인 탐이 허무하게 무너졌다”며 목포 정치권의 전략 부재와 정치력 부족을 비판했다.

목포대 의대 유치와 관련, 목포·신안·무안·영암 등 서남권 지자체, 지역 국회의원·지방의원, 목포대의 공동 전선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

장기간에 걸친 의대 유치전에서 정부 정책 방향을 분석하며 경쟁 대학과 지역 움직임에 맞춰 대응하는 전문적인 전략기구가 필요했지만 사실상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책임론도 빠지지 않는다.

김승길 전 특별시의원 경선 출마자는 김원이 국회의원이 의대 유치라는 중대한 지역 현안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중앙당 전략기획위원직을 맡은 것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목포대 의대 유치가 무산됐다고 해서 지역의 의료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왜 패배했는지를 제대로 분석하라는 것이다.

누가 어떤 전략을 세웠고 어떤 판단을 했으며, 어느 단계에서 대응이 늦었는지 공개 검증해야 한다.

36년의 숙원을 잃은 지금 목포에 필요한 것은 또 다른 현수막이 아닌 전략과 연대, 책임이다. 무엇보다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진짜 원팀이다.

실패를 정치적 책임 공방으로만 소비한다면 또 다른 지역 현안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36년을 기다린 목포대 의대 유치전이 끝난 지금 지역사회가 던져야 할 질문은 그래서 하나다.

“우리는 왜 졌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면 36년의 기다림은 단순한 실패를 넘어 또 다른 36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목포시민의 날 사회적약자 ‘특별초청’ 방식 재검토

10월1일 행사 초청·인솔 방식 놓고

인권감수성 제고 촉구 자성 목소리

“배리어프리 환경 구축 필요” 지적

市 “공감 물리·심리적 문턱 낮출 것”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가 시민의 날 행사를 앞두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존 ‘특별 초청’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며 포용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행정 변화를 예고했다.

30일 목포시에 따르면 오는 10월1일 열리는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의 초청·인솔 방식에 대해 공직사회 내부에서 인권 감수성 제고를 촉구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최근 목포시청공무원노동조합 자유계시관에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려는 행사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비판적인 글이 올라와 공직사

회의의 눈길을 끌었다.

‘배려’라는 이름의 작성자는 “한부모나 다문화 가구를 ‘특별 초청’ 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이 자칫 원치 않는 시선을 집중시키고 심리적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상당수가 평일 시간에 생업에 종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주간 행사에 무리하게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일부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장애인 참석자를 별도로 ‘인솔’하는 방식 역시 당사자의 참여 결정권과 자유로운 이동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진정한 자립 지원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작성자는 시민인권옹호관에게 초청 방식이 당사자에게 자칫 대상화나 차별로 느껴질 여지가 없는지 전문적인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특정 시민을 분리해 혜택을 주는 시혜적 접근에서 벗어나, 휠체어 이용자 등 누구나 스스로 결정하고 제약 없이 이동

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환경 구축을 제안했다.

해당 게시글은 순식간에 800여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과거 행사에서 초청된 학생이 상처를 받았던 사례가 있다”는 등 공감과 지지 댓글이 줄을 이었다.

시는 이 같은 공직사회 내부의 지적을 수용해 시민의 날 행사 운영 방식을 당차로 중심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행사 당일 특정 초청 대상의 좌석을 별도로 구분 짓거나 단상에서 소개하는 절차를 전면 폐지하고 모든 시민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에게 소통의 장을 열어주려던 취지였으나 ‘특별 초청’이라는 명칭이 당사자 입장에서 충분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누구나 불편함 없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심리적 문턱을 낮추고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세심한 생활복지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

함평군, 281억 규모 車부품기업 유치 성과

목우에이치텍·성원에스피 투자협약

빛그린국가산단 제조 공장 건립 계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은 31일 “최근 군청에서 이남호 함평군수와 배방희 ㈜목우에이치텍 대표, 이병철 ㈜성원에스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 281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군은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을 잇달아 유치하

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청신호를 켜다.

2개 기업은 협약에 따라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내 3만2천52㎡ 부지에 총 281억원을 투입해 트럭 적재할 도어, 차량 상단 루프랙 바 등을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군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신규 고용 창출은 물론, 빛그린국가산단 내 자동차 소재·부품·장비 산업 집적화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남호 함평군수는 “2개 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



반이 되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확대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함평=기영규 기자



한빛원자력본부는 최근 전남광주 영광군 흥농읍 커뮤니티센터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한빛원자력본부 제공〉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주민 의견 수렴

한빛원자력본부, 설명회·토론회 개최

한빛원자력본부는 31일 “최근 한빛본부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시설 시설계획 초안에 대한 첫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저장시설은 한빛원자력본부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오는 200년 중간저장시설로 최종 인도하기 전까지 원전 부지 내에 안전하게

임시 보관하기 위한 필수 시설이다.

설명회에서는 시설 설치 목적과 개요를 비롯해 투자 금액, 자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한빛원자력본부는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오는 9월 2-3일 전북 고창군에서 주민설명회를 추가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문가와 주민 대표가 직접 참

여하는 심층 토론회도 9월1일 영광군, 4일 고창군에서 각각 열어 군민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 밖에 세부사항은 관할 지자체·한빛원자력본부 담당부서(061-357-7371-3)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한빛원자력본부 관계자는 “설명회와 토론회를 통해 시설 건립 필요성과 안전성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수렴된 주민 의견을 시설계획에 충실히 담아 향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